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 2021-2호 | 2021년 3월 17일 | 발행처 민주연구원 | 발행인 홍익표 | idp.theminjoo.kr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 제2라운드: 폭넓고 촘촘한 지원으로 포스트코로나 대비

고 승 연 연구위원 (사회복지학 박사)

♣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의 유형별 특징: 긴급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와 안정'에 총력

- 2020년 4차례 추경을 통해 총 14조원 투입, (재직자 지원)유럽 및 일본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고용유지 및 안정에 총력
- (실업자 지원)기존 구직급여 제도 유지하면서 저소득 실업자 지원에 집중,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실업자 지원
- (유연근무 지원)법정상병지원은 없으나 유연근무 추가 지원은 주요국과 유사

■ 지원대상 및 내용상의 특징: 넓은 사각지대와 지원의 형평성·현실성 문제

- 넓은 사각지대: 일자리 회복가능성이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편적 대책 미흡, 장기 실업자와 급증한 비경제활동인구(구직단념자)에 대한 관심 부족, 이로 인한 사각지대의 확대와 취약계층의 소득공백기의 장기화 우려
- 지원의 형평성과 현실성: 상병 및 돌봄 등을 위한 유연 근무의 개인적 편차에 대한 대책 미흡, 정액지원의 형평성 문제, 청년 지원의 현실성 문제

■ 향후 정책 방향: 폭넓고 촘촘한 일자리 지원으로 포스트코로나 대비

- '수급자' 입장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지원 금액의 현실성과 형평성 제고
- 사태의 장기화 대비, 장기 실업자,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역량 유지 및 확충 지원
- 비대면 부분의 매출 증가 기업들과 상생형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
-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폭넓은 고용유지 방안 설계
- 직접 일자리 지원보다 청년 대상 전문교육 우선 실시

I.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의 유형별 특징(주요국과 비교)

- 우리나라는 2020년 4차례 추경을 통해 총 14조원 투입, 전례없는 특단의 대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안정에 총력¹⁾

- (고용유지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대폭 확대, 현장노사 밀착 지원, 기업지원 시 고용유지 조건 부과 등 노사의 고용유지노력 최대한 지원
 - ‘20년 고용유지지원금 2조 3천억원 지급(‘19년 대비 34배로 증가)
- (생계안정 지원) 특고·프리랜서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계안정 지원(267만명, 3조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211만명), 청년특별구직활동지원금(18.5만명), 법인택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8만명),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29만명),
- (일자리기회 확대) 약 155만개의 민간·공공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생활 안정 및 노동시장 회복력 유지

○ 유럽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한 ‘고용유지 지원’에 집중

- 대부분 국가들이 고용 유지와 실직 방지를 위해 기업 또는 고용주를 지원하는 간접지원 방식과 상병급여, 실업급여, 저소득층 소득지원, 각종 바우처 제공 등 개인과 가구에 직접 현금을 제공하는 직접지원 방식을 병행²⁾
-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도 고용보험 적용밖에 있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대응으로 임시적 집중 지원
 - 미국, 핀란드, 프랑스 등은 실업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 우리나라나 일본은 직접 현금 지원
- 고용유지를 위해 기존의 휴업지원 제도를 보완·확대한 유럽 국가들과 유사하게 우리나라도 기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확대 운영
- 우리나라는 우선지원대상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집합제한·금지 업종을 별도로 규정하여 특별 지원을 하고 있어 대상업종 종사자의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

○ 미국은 실업자 지원에 집중, 많은 국가들도 실업급여 대상자 확대·기간 연장·소득대체율 인상 등으로 실업자 지원 강화, 우리나라는 저소득 실업자 지원에 집중

- 상대적으로 노동 유연성이 높은 미국은 고용유지보다 실업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넓고 두꺼운 실업자 지원 실시
 - 기존 실업수당에 600달러를 추가, 기존 수급기간보다 13주 연장하여 ‘20년 12월까지 총 39주 지급³⁾
-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은 실업급여 대상자 확대, 기간 연장 등으로 실업자 지원
- 우리나라는 기존의 실업급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소득 실업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실업자 대상 직업훈련 지원 등 상대적으로 소극적 대응

1) 고용노동부. (2021. 2. 3.). 2021년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

2) 여유진, & 김성아. (2020). 코로나 19 에 대응한 긴급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382, 1-12.

3) 이승우, 류미경, & 정경은. (2020. 4.13.). 코로나19 대응 해외 사례 분석: 민주노동정책 연구원.

○ 법정상병지원은 없으나 유연근무 기간 연장 또는 지원금 확대 등 유연근무 지원은 주요국과 유사

- 미국(종업원 수 500명 미만 고용주는 긴급유급병가 의무화), 일본(자녀의 휴교 및 휴원에 따른 휴직 지원)에 비해 대책의 강도는 미약하나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대상으로 한 유연근무 지원 강화
- 법정상병지원이 없어 개인별 고용상황에 전적으로 의존

〈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 유형별 주요국과 비교 〉

유형	국가	근로자 지원(직접지원)		고용주(사업장) 지원(간접지원)		비고
		금전 지원(소득지원)	기타	금전 지원	기타	
코로나19 상병지원	우리나라 주요국	- · 유급 병가	- · 병가 기간 연장	- · 근로자 병가시 급여 지원 또는 세금 공제	- -	- · 중소기업 사업장
유연근무 지원 (돌봄, 재택근무)	우리나라	-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간 및 인원 확대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지원)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집합제한·금지 업종, 특고·프리랜서는 한시적으로 집중 지원
	주요국	· 유급 휴가	· 돌봄 휴가 조건 완화 · 휴가 기간 연장	· 근로자 휴가시 급여 지원 또는 세금 공제	-	· 중소기업 사업장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우리나라	·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유급휴업·휴직수당 지급	· 유급휴업·휴직 기간 연장	·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휴업·휴직수당 일부 지원 · 집합제한·금지 업종 고용 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 ‘고용유지자금융자’ 신설 ·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	특별고용지원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집합제한·금지 업종, 특고·프리랜서는 한시적으로 집중 지원
	주요국	· 한시적 해고(부분 실업, 일시 해고) 기간 중 임금 보전 · 단축근무수당(조업단축지원 제도) 증액	· 한시적 해고 적용 대상 확대 · 지원 기간 연장 · 단축근무수당 대상자 확대	· 대출한도 확대, 금리 인하 · 고용유지(조정)지원금 · 한시적 해고기간 중 고용주 부담 임금/보험료 등 지원 · 고용주 부담 단축근로수당 사회보험료 보전	· 대출기간 연장 · 무담보 대출 · 한시적 해고 신청절차 단순화	· 중소기업 사업장 · 정부명령에 의한 (부분) 휴업 사업장 · 큰 폭의 수입 감소 사업장
실업자 지원	우리나라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 확대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 한시적 재도입 · 저소득 미취업 청년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 구직급여 신청 단순화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충 · 청년 디지털일자리 지원 · 청년 일경험 지원 ·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신설	-	-
	주요국	· 실업급여액 증가	· 실업급여기간 연장 · 실업급여대상 확대	-	-	비정규직,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추가
기타 (생계지원 등)	우리나라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실업자 등 생활안정자금 지원 · 코로나 특별 훈련수당 지급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	-	· 고용취약계층 긴급소득지원 · 영세사업장 경영부담 완화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인원 확대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	-
	주요국	· 근로취약계층 소득 지원	-	· 세금,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	-

II.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 지원대상 및 내용상의 특징

(1) 넓은 사각지대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고용취약계층 확대되고 있어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도 비례적으로 증가
 - 특별고용지원업종, 집합제한·금지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특고·프리랜서 등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이 큰 특정 대상에 지원 집중되고 있으나 사태의 장기화로 취약대상을 한정짓는 것이 오히려 사각지대를 키우는 역효과 야기

< 코로나19 고용취약계층의 유형과 지원 내용 >

고용상태의 회복가능성		→ 低	
고용구조의 회복가능성	高 ←	高	低
	高 ↑	코로나19로 일시적인 타격을 입은 특수 업종 종사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집합제한금지업종 집중 지원	코로나19로 근로시간 단축·실업상태의 비정규직 근로자 (임시·일용직, 특고, 프리랜서 등)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생계지원금 ⇒저소득 실업자/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 직업훈련 지원, 생계비 대부
고용구조의 회복가능성	低 ↓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실업·휴업상태에 있는 임금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비대면화 및 행정명령으로 사업기반 약화·붕괴된 영세 자영업자 (도·소매업, 식음료업 등) ⇒고용유지지원금 ⇒영세사업장 임금 보조 ⇒사회보험료 지원 및 납부유예 등

코로나19 고용대책의 사각지대

- 비정규직 근로자 (7,426천명)
 - 특고·프리랜서가 아닌 경우
 - 저소득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근로시간이 감소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닌 경우
- 장기 실업자, '쉬고있는' 비경제활동인구, 구직단념자
 -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경우(118천명)
 - 비경제활동 사유가 학업, 가사 등이 아닌 쉬고 있는 경우(2,374천 명)
 - 실직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구직단념자 605천명)

주: '고용구조'의 회복가능성 - 코로나19로 주된 일자리에서 벗어나거나 종사상지위(상용직-임시직-일용직 임금근로자, 고용원 있는/없는 고용주)가 변동한 경우,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는지 여부

'고용상태'의 회복가능성 - 코로나19로 일시적 또는 무기한으로 취업자가 실업, 비경제활동, 구직포기상황 등의 고용상황으로 변동된 경우,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는지 여부

주: 특별고용지원업종: 여행, 관광숙박, 관광운송, 공연전시('20.3.16.~'21.3.31.),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20.4.27.~'21.3.31.)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500인 이하 제조업, 300인 이하 보건업·건설업, 200인 이하 도소매업·숙박음식업 등(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

○ 코로나19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편적 관심 필요

- 비정규직 근로자 중 다수가 고용보험이나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상황, 특고·프리랜서나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는 코로나19의 고용 대책에서도 제외4)

- ‘20년 8월,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7,426천 명(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이중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700천 명)
- 비상용 근로자의 36.8%(2020년 12월)가 코로나19로 실직 경험, 이 중 77.3%는 실업급여 비수급, 휴직 경험자 중 절반(59.3%)은 휴업수당 비수급
- 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은 94.7%, 비정규직의 경우 60.3%
-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일자리 기반이 크게 악화되었지만 지원은 일자리의 취약정도가 아니라 소득기준(중위소득 60%, 2/3 수준)으로 선별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비정규직 55.3%, 정규직 17.5%(월급 150만원 미만 노동자의 비율은 61.7%, 월급 500만원 이상 노동자의 비율은 13.7%)

○ 일자리 회복가능성이 낮은 장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구직단념자)에 대한 관심 필요

- 코로나19 대응 실업자 지원은 저소득자 대상 생계지원뿐이며, 일반적인 실업자 지원은 기존 구직급여 제도 범위에서만 지원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미흡
- 더욱이 코로나19로 실업자 증가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 및 구직단념자가 크게 증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 활성화에 애로점으로 작용 가능
 - ‘20년 비경제활동인구(1,725.5만명) 69.0만명 증가, 이중 ‘쉬었음’ 인구는 전년대비 13.5% 증가한 2,374천 명, 구직단념자는 605천명으로 전년대비 13.6% 증가⁵⁾
-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경제활동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경제활동인구로 재진입 불가, 결국은 복지대상으로 전락 가능

○ 고용취약계층의 구직 가능성이 크게 감소되고 취업 소요기간이 길어지면서 소득공백기의 장기화 우려

- 지난해 3월 워크넷 구직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21.2%를 기록
- 워크넷 구직등록 후 3개월 이내 취업 평균 소요기간이 2019년 2월 32.8일에서 지난해 2월 34.8일, 2019년 3월 34.8일에서 지난해 3월 37.3일로 증가⁶⁾
- 대부분 실업자들이 실업급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취업 소요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까지 미취업 상태 지속 가능

4) 공공상생연대기금. (2021. 1. 18).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 결과.('20년 4월·6월·9월·12월 4차례에 걸쳐 전국의 만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진행)

5) 통계청. (2021. 1. 13.). '20.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

6) 한국고용정보원. (2021. 1. 29.).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변화.

(2) 지원의 형평성과 현실성 문제

○ 고용안정망 미비로 인한 특고·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긴급 지원, 지원 성과는 의문

- 고용안전망의 (대상) 범위와 깊이(임금대체율, 급여액)에 있어 주요국에 비해 취약, 특히 고용안전망에서 제외되었던 특고·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책의 적절성에는 한계
-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기존 제도의 운영 방식을 완화 또는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형태로 대규모의 일시적으로 직접 지원 실시, 대책과 효율성과 효과 의문

○ 코로나19 관련 상병 및 돌봄 등을 위한 유연 근무의 편차

- 기업규모나 고용형태에 따라 근로조건이나 근로자 복지 수준간 갭이 커서 상병수당이나 유연 근무의 혜택 여부에 큰 편차 존재
-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유연 근무 지원은 기존에 유연 근무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어 제도가 미비된 취약한 근로조건 하에서 역차별 발생 가능

○ 청년 대상 다수의 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나 기존 사업의 확대 또는 조기 집행이 대부분, 특히 사업체 일경험이나 채용지원 사업은 현재 경제상황에서는 다소 회의적

-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청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
 -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충, 중견기업채용보조금 신설, 청년디지털일자리, 일경험 지원 확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 이중 사업체 일경험이나 채용지원 사업은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사업체에 부담, 일자리 유지나 확대도 부정적
 - 정부가 2020년 청년 디지털일자리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8000억 원을 투입, 일자리 11만 개를 계획하였으나 30% 이상 달성 미달(실행: 7만3천여 명, 2021년 1월 13일 현재)⁷⁾

○ 소득 지원 금액의 형평성과 현실성 미흡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대한 정액 지원금(월 50만원 정도)은 지급 유무에 대한 의미를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적합성을 논하기 어려운 수준
 - ‘20년 3분기 1인 가구 월평균소득 302만9000원(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임금의 일정비율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에 비해 형평성과 현실성 부족

7) 고용노동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III. 향후 정책 방향: 폭넓고 촘촘한 일자리 지원으로 포스트코로나 대비

○ 첫째, 코로나19에 대한 일시적 대책 마련이 아니라 고용안전망 혁신의 기회로 인식

- 위기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구직급여 등 고용안전망의 유지력이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어, 위기상황의 기간과 심각도에 따라 지원 금액·기간이 비례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유연성 필요
- 또한 현재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지원 중 하나인 상병수당의 경우, 필요성 인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를 정책 실험의 중요한 기회로 인식하여 우선적으로 저소득 및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한 정책 결단과 실행 필요

- (오스트리아, 독일)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제정된 감염병 예방법을 통해 자동 메커니즘 적용, 집에서 일할 수 없는 격리된 직원을 병가로 간주⁸⁾
-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영국)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 병가 혜택의 적용 범위를 확대
-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아프거나 격리 중인 근로자를 위한 위기 급여를 새로 도입
- (벨기에, 프랑스) 집에서 일할 수 없는 격리자들이 임시 근로시간 단축(STW) 제도로 지원
- (노르웨이) 노동시간 단축(휴업), 병가, 자녀 돌봄, 자가 격리 등 모든 경우에 급여 및 수당에 관한 권리를 보장

○ 둘째, 수급자 입장에서 적절한 규모와 방법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검토 필요

- 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출 규모가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⁹⁾으로, 대상자의 식역(threshold) 수준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지원 확대 필요

- (프랑스) 최저임금 4.5배 한도로 부분 실업(휴업) 지급액(임금의 70%수준) 100% 보상
- (독일) 단축근무제로 소득 50%이상 감소한 경우 임금대체율 80~87%까지 단축근로수당 증액
- (스페인) 일시해고시 임금총액의 70%까지 실업급여로 지급
- (벨기에) 실업 급여를 평균 임금의 70%로 인상
- (영국) '임시휴가 노동자'로 지정하고 통지하게 되면, 정부는 최대 2,500파운드 한도로 급여의 80%를 지급하며, 3개월 운영 후 연장 가능
- (덴마크)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업할 경우 '일시해고'가 아닌 '고용 유지'상태로 보고 실업급여가 아닌 평상시 임금을 그대로 지급

- 정해진 기간 동안 일괄 지급보다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체감(遞減) 또는 체증(遞增), 일시 지원 등 대상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설계의 유연성 보완

8) 이하 주요국 사례는 이승우, 류미경, & 정경은. (2020. 4.13.). 코로나19 대응 해외 사례 분석: 민주노동정책 연구원. 참고

9) GDP 대비 정부 지출규모(2020년 6월 12일까지): 미국 12.3%, 일본 11.3%, 독일 9.4%, 호주 8.8%, 영국 6.2%, 캐나다 5.6%, 이탈리아 3.5%, 한국 3.1% (자료: 이기쁨. (2020). 코로나 19 확산 이후 국가별 정책대응과 고용지표 현황. 노동리뷰, 43-54.)

- (노르웨이) 최대 26주까지 노동시간 단축 또는 휴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휴업 중 20일 동안은 임금 전액을 수령하고 그 이후부터는 실업급여를 수령
- (네덜란드) 조업단축지원금 지급 기준: 매출 50% 손실시에는 임금의 45%, 매출 25% 손실시에는 임금의 22.5%를 지원하되, 신청한 매출 손실에 따라 계산된 고용보험청은 지급액의 80%를 선지급 후 추후 정산(우리나라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괄 적용)

○ 셋째, 청년일자리 지원은 포스트코로나 대비, 민관협력을 통한 전문화된 직업훈련을 우선 추진

- 청년일자리 지원으로 기업체 일경험을 통한 지원을 다양하게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일자리 지속성 등의 성과가 상당히 회의적
- 민관협력을 통한 좀더 전문화된 신기술 직업훈련 프로그램¹⁰⁾을 기획 운영, 뉴딜사업 참여 등 실질적인 취업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한 미래지향적 투자가 바람직

○ 넷째,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근로형태를 포괄하는 좀더 확대된 고용유지 방안의 설계

- 최근 체감실업률(2020년 13.6%, 청년 25.1%) 증가는 사각지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다양한 근로상황에 대한 폭넓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¹¹⁾
- 비정규직의 고용유지를 위해 주요국들이 STW(short-time work: 임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비정규직까지 확대·지원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

- (네덜란드) 네덜란드 정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존의 조업단축제도(WTV)를 확대하여 신규로 임시 긴급 고용유지지원제도(NOW) 시행, 이를 통해 호출형(on-call), 임시직(temporary workers)을 대상으로 포함시켜 유연한 근로자(flex workers)들의 고용 보호¹²⁾
- (독일) 기존 적용대상(정규직, 기간제 비정규직)만이 아니라 원래 제도에서 제외된 파견노동자까지 확대 적용-단축근무제(Kurzarbeit) 도입 요건 완화
-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STW(short-time work) 제도로 정규직 종사자만 지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임시직, 파견직, 특정범주의 자영업자도 포함하도록 가입 자격 범위 확대(STW 제도가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악화시키는 위험 제거)
- (스페인) 임시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최소 기여기간 폐지. 수습기간 동안 실직한 근로자와 새로운 일자리 제안을 받고 자발적으로 기존 직장을 그만두었지만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접근성 제공

10) 중앙일보, 이곳 거치면 기업이 믿고 뽑는다는데...비결은 실전형(2021.01.26.) - 취업 춘궁기에 SSAFY(삼성청년SW아카데미) 교육생들 대기업·금융기관, 채용 입도선매 교육생 "짜피만 말해도 합격 위력" 현장 실전형 인재로 양성한 때문...

11) 체감(확장)실업률: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미만인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추가취업이 가능한 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일을 하지 않았고 일을 희망 하고 일이 주어지면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한 실업률

12) 김현경, & 김기태. (2020). 유연안정성 모델 국가들의 코로나 19 대응 노동정책: 덴마크와 네덜란드. 국제사회보장리

○ 다섯째, 포스트코로나 대비 장기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역량 확충 지원

- 장기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대부분이 양극화된 일자리의 취약한 상황, 개인적 및 국가적으로 포스트코로나 대비 가장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집단으로 인식
- 관련된 정부의 주력 사업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이 큰 폭의 예산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청년을 중심으로 사업이 재편,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인 접근가능성에 다소 제한
 - 국민내일배움카드 ‘21년 예산 1084억 원(전년대비 102.2%), 이중 64.8%가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할당되었으며 일반직종 훈련 예산은 20% 감소
- 분야에 상관없이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교육 선택의 폭을 넓히고 동시에 미래 일자리 수요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의 전문성과 실질성에 초점을 두고 설계 필요

- (프랑스) 직업학교의 핵심 교육과정 및 전문자격취득 교육과정을 3개월 동안 원격으로 무료 제공
- (일본) 코로나19에 따른 실업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동시에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돌봄 인력 확보를 위해, 실업·휴업자가 돌봄 관련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교육비와 생활비 등과 20만엔(약 210만원)을 대출 지원. 자격증 취득 후 고령자 돌봄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등에서 2년 간 취업하면 상환을 면제(‘21년 최소 2만2,000명 지원 목표)¹³⁾

- 또한 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자기부담금 완화 등)과 개별적인 학습 상담 및 적극적인 홍보 필요

○ 여섯째, 코로나19로 매출이 증가한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상생형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

-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은 부정적인 의견이 있음에도 일자리 수가 급감한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으로, 운영 방식에 융통성을 부여하여 다양한 일자리 개발 추진
-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성과에서도 양극화 발생, 특히 비대면 소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관련 기업¹⁴⁾의 성과 급증, 이들 기업과 제휴를 통해 상생형 일자리 개발
- 시간제를 포함하여 근무형태를 다양화하고 정부의 직접일자리 예산으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중장기 운영

붙, 13, 36-46.

13) 한국일보, (2021. 1. 10) "돌봄 산업으로 전직 어떠세요?" 日, 코로나 실업자에 무료 직업교육 지원

14) ‘20년 전년(‘19년)대비 매출액 증가율: 쿠팡 41%, 카카오 35%, 엔씨소프트 31.1%, 네이버 21.8%

[부록]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

<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 >

구 분		내 용	시기
고용약화 지역별맞춤형 고용안정지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 광역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기업), 근로자·구직자 대상 기업지원 및 고용안정 대책 마련 → 예산 지원	1차 추경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안정지원	영세사업장 경영부담 완화	-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임금을 보조(인당 추가 7만원, 4개월)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고용안정 도모	1차 추경
	사회보험료 지원인원 확대	-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와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인원 확대	1차 추경
	고용·산재보험 료 납부유예	- '21.1~3월 영세사업장·자영업자 등 신청시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간 납부유예의 허용 확대	코로나 3차 확산대응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인원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한시적 재도입	- 소비심리 및 경기위축으로 취업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확대 -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전제로 폐지한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여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21년 1/4분기에 청년 3.9만명 대상 상담 → 직업능력 향상 → 취업알선 등 단계별 취업지원	1차 추경 코로나 3차 확산대응
	청년추가고용장 려금 확충	- 올해 목표인원 29만명(신규 9만+기존 20만)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자금여력 확충	1차 추경
	청년특별구직지 원금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저소득 미취업 청년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1회 50만원) 지원	4차 추경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확대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고용유지지원금)	- 유급휴업·휴직 인원 확대, '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최대 월50만원×3개월) 신설 등 지원대상 87만명 확대 -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특례기간을 당초 6월말에서 9월말까지 3개월 연장, 7월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 -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한도 180일을 소진한 경우, 지원기간을 3개월 간 연장하고 월 50만원(총 150만원)을 정액 지원 - 일반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최대 180일→240일)하는 등 고용유지지원인원 24만명 확대	3차 추경 코로나 3차 확산대응 4차 추경
	집합제한·금지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 집합제한·금지 업종 사업주가 경영 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수당 등의 최대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	코로나 3차 확산대응
	고용유지자금 자 신설	- 자금 부족으로 휴업수당 지급 여력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자금 융자 신설(고용유지지원금 연계)	3차 추경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 노사 간 고용유지합의를 체결하여 일정기간 동안 고용유지 시, 최대 6개월 간 임금감소분의 일정비율(50%) 지원 -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 간 임금감소 합의 시, 감소분 일부를 지원하는 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내년 말까지 계속 시행	3차 추경 코로나 3차 확산대응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추가 지원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1차)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114만명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월 50만원 × 3개월)' 총 150만원 지원 - (2차)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1개월) 추가 지원 -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중 신규로 신청하는 20만명에게 150만원(50만원×3개월) 지원	3차 추경 4차 추경
	긴급고용안정지 원금	- (3차)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00만원을 지원	코로나 3차 확산대응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과 후 학교 강사 등 9만명에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활동보조 인력 등 11만명 취약계층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코로나 3차 확산대응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지자체와 협조하여 법인택시기사의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을 1인당 100만원 지원 - 법인택시 기사 9만명 중 일정기간 근속 여부 등 확인을 거쳐 8.1만명 지원 - 승객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원 예정	4차 추경 코로나 3차 확산대응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재취 업 지원	구직급여 규모 확대	- 구직급여 신청 급증 등을 감안하여 구직급여 규모 확대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신청 증가,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장기화 등에 선제 대응하여 3만명분 추가 지원	3차 추경 4차 추경
	생활안정자금 지원	- 의료비, 자녀학자금, 소액생계비 등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한도 상향(1인당 2→3천만원) 및 지원인원 2만명 확대 - 특고, 저소득 근로자 등에 대해 연 1.5%로 최대 2천만원까지 생계비,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을 용자하는 사업을 확대 실시 - 산재보험 미가입 특고 종사자에도 생활안정자금 용자 신규 지원 -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월 50만원 x 2개월) 지원	3차 추경 코로나 3차 확산대응 3차 추경
	코로나 특별 훈련수당 지급	- 실업자·무급휴직자 등 12만명에게 직업훈련을 추가 지원(특별 훈련수당) - 무급휴직 기간 중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수당을 매월 30만원(코로나 대응 특별 훈련 수당) 추가 지급하여 휴직 장기화에 따른 직무능력 저하 보완 및 생활안정 도모 - 중장년층 대상 '코로나 대응 특별 훈련수당' 지급: 실업자, 무급휴직자(무급휴직지원금 180일 수급완료자 중 90일 연장 지원 중인 자)가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계지원을 강화	3차 추경 코로나 3차 확산대응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확대	- 훈련기간 동안 생계비 대부 지원대상을 무급휴직자, 특고 등으로 확대 -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 실업자, 무급휴직자, 특고, 폐업·휴업 중인 자영업자가 3주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월 단위 200만원(1인당 총 2,000만원) 한도로 생계비 대부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거주 훈련생은 소득에 관계없이 대부받을 수 있고, 대부한도도 월 300만원(1인당 총 3,000만원)까지 가능	3차 추경 코로나 3차 확산대응
	청년 디지털일자리 지원	-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컨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중견기업에 6개월 간 인건비 지원(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 확대 -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원인원 5만명 중 1.25만명을 '21년 1분기 중에 채용 완료할 계획	3차 추경 코로나 3차 확산대응
	청년 일경험 지원	- 중소기업이 청년을 단기 채용하여 일경험 기회 부여 시 6개월 간 인건비 지원(5만명, 월 최대 80만원)	3차 추경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신설	-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로 취업이 어려운 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5만명 분 중소기업·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신설	3차 추경
	직접일자리 조기 채용	- 민간의 채용여력 위축에 대응하여 노인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직접일자리 참여 목표인원 104만명 중 50만명을 2021년 1월 이내에 조기 채용 -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3.7만개도 '21년 1월 바로 채용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역별 컨소시엄*이 30~40대 구직자 대상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적극 발굴	코로나 3차 확산대응 코로나 3차 확산대응
	가족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 강화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20.9.8)'으로 가족돌봄휴가기간이 당초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부모는 10→25일), 이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기간 및 인원 확대 - 가정 내 자녀돌봄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을 근로시간 단축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유연근무제(재택·원격·시차출퇴근·선택근무제)를 시행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해 주당 5~1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 유연근무 2만명 추가 지원	4차 추경 코로나 3차 확산대응 4차 추경
	필수노동자 건강관리 지원 확대	-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필수노동자(보건의료, 돌봄, 택배·배달, 환경미화 등 사회기능 유지 필수분야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44개 근로자건강센터 인력 및 장비 확충 - 택배 등 고위험 직종 1.5만명에 대해 건강진단 비용지원으로 검진실시를 유도하고, 혈압·혈당 등 뇌심혈관질환(과로사) 위험지표에 이상이 있는 고위험군 4천명을 선별하여 심층 건강진단 및 전문의의 주기적 진찰 등을 통해 과로사 예방 계획	코로나 3차 확산대응

주: 2020년 고용노동부 추경 내용 및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중 고용관련 내용 정리(고용노동부 관련 2차 추경은 없음).

자료: 1차추경-고용노동부. (2020. 3. 18). 2020년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3차추경- 고용노동부. (2020. 7. 3). 2020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4차추경- 고용노동부. (2020. 9. 23.). 2020년 고용노동부 소관 제4차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

코로나 3차 확산대응- 고용노동부. (2020.12.29).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관계부처합동. (2020. 12. 29.).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